

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

* 후속으로 '관광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전북의 문화·관광전략'작성 예정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4.23 vol.165

www.jthink.kr

연구진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4.23 vol.165

CONTENTS

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

I.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4
1.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	4
2. 체류인구의 필요성	5
II. 시나리오별 전라북도 체류인구 현황	6
1. 계획인구	6
2. 체재·교류인구	7
3. 관광체류인구	7
III. 체류인구의 제도적 적용방안	9
1.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9
2. 예비타당성조사	10
3. 교부세	10
IV. 시사점	11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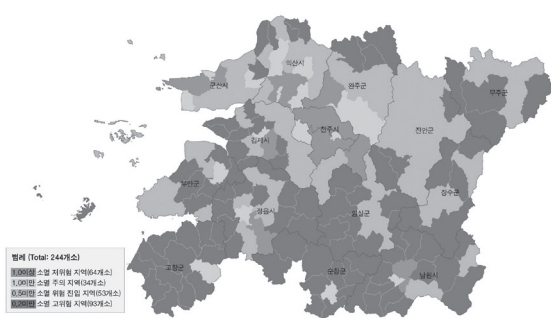
- 1980년대부터 추진된 경부축 중심의 SOC와 산업투자로 인해 수도권 및 경부축 중심의 성장과밀은 현재까지도 동서간,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원인제공
- 국토의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개발수요에 입각한 예산투자를 위해서는 상주인구외의 관광객을 포함한 실질적 “체류인구”를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거주인구는 수도권과 부경권 등 대도시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지만 거주인구와 관광객수를 합한 체류인구는 인구가 적은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
- 체류인구의 개념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 제주도 도시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획인구는 관광객 총량에 계획일 집중률과 동시체재율을 적용하여 1일 체류인구를 추정하고 거주인구를 합하는 방식으로 인구추정
- 1일 체류인구를 전라북도에 적용할 경우 전라북도의 도시계획인구는 거주인구 1,854,607명에 1일 체류인구 412,849명을 합한 2,267,456명으로 예측
- 〈시나리오 2〉 일본 관광청은 체재·교류인구를 정주민구 1인당 연간소비액과 관광객의 소비액을 비교하여 정주민구 1인당 관광객 수를 산출한 후 정주민구와의 합으로 정의
- 국내 정주민구의 1인당 소비액을 관광객 소비와 비교한 결과 정주민구 1인은 국내 숙박관광객 60명, 국내 당일관광객 166명, 방한 외국인 8명과 맞먹는 것으로 나옴
- 정주민구 1인당 소비액 기준으로 관광객을 정주민구로 산정하면 전라북도 교류인구는 451,620명이며 여기에 정주민구를 합한 체재·교류인구는 2,306,227명으로 추정 됨
- 〈시나리오 3〉 거주인구와 관광객수를 합한 관광체류인구를 전라북도에 도입해 보면 거주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합한 관광체류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7년 현재 관광체류인구는 약 3698만명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
- 전라북도의 2017는 거주인구는 185만명이지만 체류인구를 포함한 인구는 시나리오별로 227만명, 433만명, 3698만명으로 예측돼 향후 공공인프라 및 국가예산투자결정에 체류인구를 적용하는 방안 필요
- 전라북도는 체류인구 증대를 위해 매력적인 국토공간과 농촌체험을 활용한 관광객 체류인구 확대전략 필요
-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토종합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교부세 산정 등에서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한 체류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개발 수요파악 및 예산배정 필요

I.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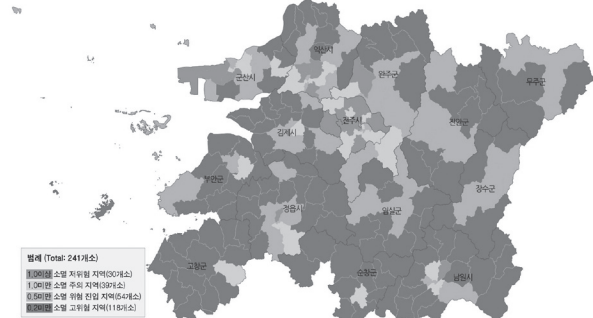
1.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

- 저출산 기조의 지속과 대도시권으로 지역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인구감소는 생산인구와 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는 상황
- 국토연구원(2014)은 현재와 같은 경쟁적 성장의 배분방식과 기술중심의 경제발전이 지속될 경우 기술발달에 따른 이동성 제고, 고밀 토지이용 증가, 집적경제강화 등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은 대도시 집중과 대도시권 강화가 두드러져 메가도시권이 확대되는 아령형 이극 집중 구조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¹⁾
- 수도권은 강원 서부, 충청권까지 확대되고, 부산-울산-경남 및 경북-대구가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하면서, 국도는 크게 수충강권(수도권-충청-강원권)과 부울경대권(부산, 울산, 경남 및 경북, 대구)의 메가도시권과 여타지역으로 구분될 것으로 예측
- 또한, 현재의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29.8%, 인구 유지지역은 17.3%,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52.9%에 달하고, 인구과소지역²⁾은 전국토의 6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됨³⁾
- 지방소멸의 위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을 소멸위험지수로 활용 중⁴⁾에 있으며 전라북도의 14개시군 241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는 아래와 같음
- 소멸 저위험 지역(1.00이상)은 2005년 64개소, 2010년 45개소, 2015년 30개소로 계속해서 감소추세로 대부분 전주시 일원에 분포
- 소멸 주의지역(1.0미만)은 2005년 34개소, 2010년 37개소, 2015년 39개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 위험 진입지역(0.5미만)은 2005년 53개소에서 2010년 38개소로 감소했다가 2015년 54개소로 다시 증가
- 소멸 고위험 지역(0.2미만)은 2005년 93개소에서 2010년 121개로 증가했다가 2015년 118개로 약간 감소
- 소멸위험지수가 1.0미만인 소멸주의 지역 이상을 보면 2005년 180개, 2010년 196개, 2015년 21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1) 이용우 외, 2014,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 국토연구원
 2) 국토를 500m격자단위로 나눠 주거용 건물 유무를 기준으로 격자당 5인 이하 거주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정의(차미숙, 2015)
 3) 차미숙, 2015,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4)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그림1> 전라북도 2005년 지역소멸 지수



<그림2> 전라북도 2015년 지역소멸 지수

2. 체류인구의 필요성

- 정부의 인구정책은 인구감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인구를 증대하기 위한 인구증대정책과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효율적 인구관리 정책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



〈그림3〉 인구정책 현황

- 인구정책을 인구증대정책과 인구관리정책으로 구분할 경우 인구증대정책은 출산율을 제고와 이민자 확대 등으로 구분되고 인구관리정책은 인구과밀지역인구의 인구과소지역으로의 인구이전정책과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에 따른 효율적 국토관리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율제고를 통한 인구증대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최근 도시재생, 청년희망부리단, 고향사랑기부제 등의 정책추진과 컴팩트시티 정책제안 등 다양한 지역발전 및 인구이동을 통한 인구관리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도시인구의 지방이전과 컴팩트 시티 등을 통한 효율적 국토관리정책은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절대인구가 감소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도시인프라구축은 후순위로 밀리고 인구과밀지역에 대한 도시인프라 개선과 개발이 우선되면서 지방의 저발전 악순환은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 본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주인구외의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체류인구”를 제안하며, 체류인구를 토대로 국토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함

소결

- ① 현재와 같은 경쟁적 성장방식을 유지할 경우 1980년 이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인구나 산업이 집적된 경부권 중심의 아령형 이극중심으로 국토의 기형적 불균형발전 예상
- ② 인구감소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넘어 매력적인 자원을 가진 지방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기존의 상주인구가 아닌 관광객을 포함한 체류인구개념을 지역개발 수요의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통계청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2065년에는 4,302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II. 시나리오별 전라북도 체류인구 현황

-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를 제외하고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연구자마다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
- 체류인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유동인구, 생활인구, 체재·교류인구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지역을 단위로 한 인구개념은 생활인구, 체재·교류인구, 체류인구가 있음

〈표1〉 체류인구 관련 개념정의

구분	정의	비고
유동인구	특정지점, 일정시간 기준의 유입, 유출, 이동 인구수	통계청
생활인구	특정지역,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	서울시
계획인구	상주인구+1일 체류인구(관광객수×계획일집중률×동시 체재율)	제주특별자치도
체재·교류인구	관광객을 정주인구1인당 소비액으로 환산한 후 정주인구와 합	일본 관광청
관광체류인구	거주인구+연간관광객수	국토연구원

- 이중 유동인구는 특정지점에 한정돼 있고 생활인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정시점에서 관광객, 업무, 직장, 쇼핑, 의료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에 있는 모든 인구로 정확성은 높지만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1. 계획인구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획인구는 거주인구에 1일 체류인구의 합으로 정의
- 1일 체류인구는 연간관광객수에 계획일 집중률과 동시 체재율을 곱하여 1일 체류인구 산정

〈표2〉 계획일 집중률

구분	1계절형	2계절형	3계절형	4계절형
계획일 집중률	0.034	0.017	0.012	0.010

자료: 문화관광부(2007)관광공급지표 개발연구

〈표3〉 동시체재율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동시 체재율	0.16	0.31	0.47	0.62	0.77	0.92

자료: 문화관광부(2007)관광공급지표 개발연구

- 전라북도의 경우 제6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전라북도, 2016)에 의거 계획일 집중률은 2.5계절형인 0.0145를 동시체재율은 5시간으로 0.77을 적용
- 전라북도의 경우 2017년 기준 관광객수 36,977,069명⁶⁾에 계획일 집중률 0.0145와 동시체재율 0.77을 적용하면 전라북도 1일 체류인구는 412,849명

〈표4〉 전라북도 1일 체류인구

구분	주민등록인구	1일 체류인구	합계
계획인구	1,854,607	412,849	2,267,456
계획일 집중률		0.0145(2.5계절형)	
동시체재율		0.77(5시간)	

6)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8, 시도관광객현황

- 1일 체류인구를 적용할 경우 전라북도의 도시계획인구는 거주인구 1,854,607명에 1일 체류인구 412,849명을 합한 2,267,456명으로 예측
- 도시계획에서 주민등록인구와 1일 체류인구를 합한 인구를 계획인구로 활용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경우도 향후 주민등록인구인 185만명이 아닌 227만명을 도시계획인구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체재·교류인구

- 일본 관광청은 체재·교류인구는 정주민구 1인당 연간소비액과 관광객의 소비액을 비교하여 정주민구 1인당 관광객 수를 산출한 후 정주민구와의 합을 말함
- 일본 관광청에 의하면 정주민구 1인당 감소분은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 8명, 국내숙박관광객 소비액 25명, 국내당일관광객 소비액 8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⁷⁾
- 이를 국내에 대입해보면 국내 정주민구의 1인당 소비액을 기준으로 정주민구 1인당 국내 숙박관광객 60명, 국내 당일관광객 166명, 방한 외국인 8명에 달함

〈표5〉 국내 관광교류인구의 경제효과

구분	1인당 연간소비액	정주민구 1명 감소분	전북 관광객 ⁸⁾	전북 체재·교류인구
정주민구	15,450,433원	1명	1,854,607명	1,854,607명
내국인 숙박여행	257,112원	60명	17,226,337명	287,106명
내국인 당일여행	93,288원	166명	19,368,020명	116,675명
방한 외국인	1,886,161	8명	382,712명	47,839명
합계			38,831,676명	2,306,227명

자료 : 통계청, 2016, 민간최종소비지출, 2017, 주민등록인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정주민구 1인당 소비액 기준으로 관광객을 정주민구로 산정하면 전라북도 교류인구는 451,620명이며 여기에 정주민구를 합한 체재·교류인구는 2,306,227명으로 추정 됨
- 일본 관광청이 제시한 관광소비액을 기준으로 한 체재·교류인구개념은 관광객을 거주인구로 환산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일본의 경우도 관광객을 상주민구로 환산하여 인구지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체재·교류인구의 지역소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3. 관광체류인구

- 국토연구원의 체류인구는 프랑스의 체류인구개념을 차용하여 거주인구와 관광객 수를 합한 인구수를 체류인구로 정의
- 프랑스의 경우 거주인구는 파리, 리옹 등 주요도시에 집중되어 있지만, 체류인구는 인구가 적은 인구희박지역에 주로 분포(국토연구원, 2018 재인용)
-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도권과 부경권 등 대도시권에 거주인구가 집중하여 분포되어 있지만 거주인구와 관광객수를 합한 체류인구는 강원도와 전라도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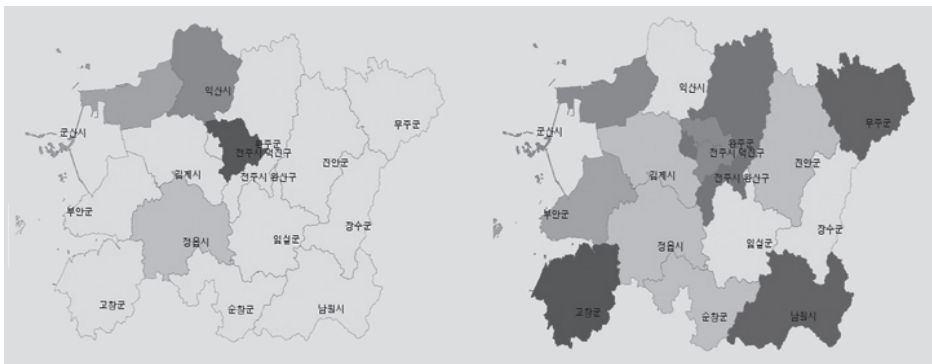
7) 다카다 히로후미, 2017, 재인용

8)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전북관광객수(2017)를 국민여행실태조사(2016)의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의 비율로 환산하여 전라북도 숙박여행객 및 당일여행객 추정

〈표6〉 관광체류인구 분포현황(2017)

	주민등록인구 ⁹⁾	관광객 수(2017) ¹⁰⁾	주민등록인구+관광객 수	순위
전체	51,778,544	416,008,727	467,787,271	
서울	9,857,426	14,606,081	24,463,507	9
부산	3,470,653	8,159,615	11,630,268	12
대구	2,475,231	11,679,988	14,155,219	11
인천	2,948,542	6,485,610	9,434,152	13
광주	1,463,770	6,727,894	8,191,664	15
대전	1,502,227	7,149,187	8,651,414	14
울산	1,165,132	5,171,954	6,337,086	16
세종	280,100	615,884	895,984	17
경기	12,873,895	76,433,499	89,307,394	1
강원	1,550,142	41,054,763	42,604,905	4
충북	1,594,432	23,785,413	25,379,845	8
충남	2,116,770	24,175,857	26,292,627	7
전북	1,854,607	36,977,069	38,831,676	6
전남	1,896,424	50,791,613	52,688,037	2
경북	2,691,706	47,450,271	50,141,977	3
경남	3,380,404	38,358,535	41,738,939	5
제주	657,083	16,385,494	17,042,57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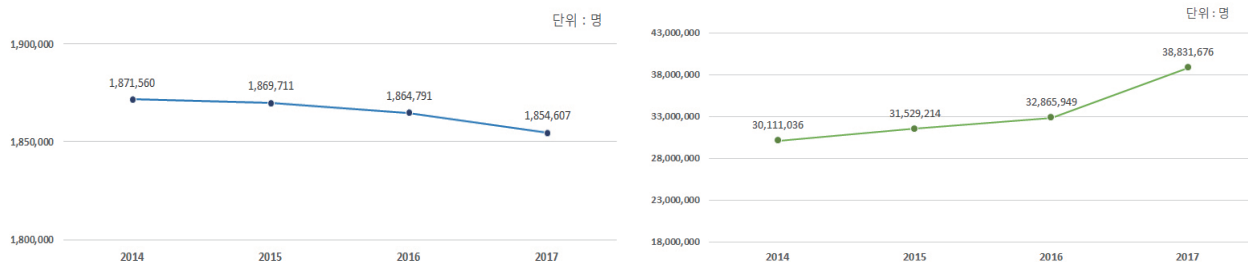
이를 다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입해 보면 거주인구는 전주시와 익산시 일대에 집중돼 있지만, 체류인구는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 집중



〈그림4〉 전라북도 거주인구 분포와 체류인구 분포현황(2017)

전라북도 거주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합한 체류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7년 현재 체류인구는 약 3698만명에 달함

9) 통계청, 2017 주민등록인구
10)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7 관광객 현황



〈그림5〉 전라북도 거주인구와 체류인구 현황

소결

- ① [1일 체류인구] 1일 체류인구를 적용할 경우 전라북도의 도시계획인구는 거주인구 1,854,607명에 1일 체류인구 412,849명을 합한 2,267,456명으로 예측
- ② [체재·교류인구] 정주민구 1인당 소비액 기준으로 관광객을 정주민구로 산정하면 전라북도 교류인구는 451,620명이며 여기에 정주민구를 합한 체재·교류인구는 2,306,227명으로 추정 됨
- ③ [관광체류인구] 전라북도 거주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합한 체류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7년 현재 체류인구는 약 3698만명에 달함

III. 체류인구의 제도적 적용방안

- 도시인프라,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시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거주인구와 그에 따른 개발수요라고 할 수 있음
- 거주인구에 기반 한 수요에 의해 지역개발이 결정적 영향을 받는 대표적 정책으로는 국토종합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교부세를 꼽을 수 있음
- 최소한 이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앞으로 주요지표로 상주민구와 더불어 체류인구를 활용하여 국토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 정부는 지역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장래인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수요와 국가적인 지역개발 수요를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
- 국토종합계획은 헌법 121조 2항과 지난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에 의거 사회간접자본(SOC)확충, 권역별산업단지조성,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의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개발전략 추진
- 광역시도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정부의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고 있음
-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인구로 광역시도는 미래의 장래인구 추정을 통해 필요한 SOC나 개발수요를 제시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제4차 종합계획에서 6개의 인구추정모형의 평균값을 활용한 추정인구와 산업단지 개발,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인구 증가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2020년 장래인구를 1,975,614명으로 추정 한 후 이와 같은 도시계획 인구를 기반으로 권역별 개발계획 수립¹¹⁾
- 하지만 장기적 추세로 볼 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거주인구가 아닌 체류인구를 포함한 인구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제주도는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수립시 상주민구와 연간관광객수와 체류기간, 계절별 체류인구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체류인구를 추정 한 후 상주민구와 체류인구를 합하여 도시계획인구로 설정¹²⁾

11) 전라북도, 2013,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12)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광역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 제주도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2025년 계획인구를 상주인구 75만명, 체류인구 25만명 총 100만명으로 설정하고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제2공항, 신항개발, 주거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용지 등을 재설정

- 향후 광역시도의 도시기본계획과 국가차원의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상주인구와 체류인구를 합한 인구를 계획인구로 산정하여 이에 따른 공공인프라와 개발수요를 측정하여 지역개발전략 수립 필요

2.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는 SOC등 공공분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시행 중
-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의 경제성 여부를 따져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및 비대도시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책
- 1980년대부터 추진된 경부축 중심의 SOC투자로 인해 수도권 및 경부축 중심의 성장과밀을 초래하였고, 수도권과 경부축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은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투자사업의 경제성을 보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절대적으로 유리
- 반대로 경제성장과 SOC투자에서 소외된 서부권의 경우 지역개발을 위한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투자사업 유치에도 소외되어 동서의 불균형이 심화
- 실제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의 고속도로에서 상주-대구 구간에 한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무주-상주 구간은 빠져있으며, 전주-김천철도, 새만금공항 등 SOC외에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새만금 내부개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황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 SOC투자를 통한 유발수요 발생으로 낙후지역의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제안¹³⁾과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비용편익분석(BC) 대신 낙후지역에 한해 예산지원 후 일정기간의 긍정적 변화를 측정 한 후 보완하는 비용효과분석(EC)으로 대체하자는 주장 제기¹⁴⁾
- 선 SOC투자 후 수요유발정책이나 비용효과분석(EC)방식 모두 결과적으로 수요의 창출이나 경제적 효과가 투자를 통해 발생가능하다는 논리이지만 초기 투자결정을 뒷받침할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류인구를 활용하는 방안 고려 필요

3. 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면적, 인구, 공무원 수, 노령인구 수, 가구 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수요액과 세입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초수요액 산정시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관리비, 보건사회복지비 등의 주요지표를 인구 수로 상정하고 있음
- 단순한 거주인구의 공공서비스 수요만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관광객을 포함한 체류인구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대로 세수입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또한 거주인구만으로 기초수요액을 산정할 경우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인구의 실질수요가 적용되지 않아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 불공평한 상황

13) 김상업, 2017, 전북-경북 끊어진 동서 교통망 국가차원의 해결 필요, 전북연구원
 14) 이승철, 201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 모색 정책토론회 토론 발언내용

- 위와 같은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수요와 공공서비스 공급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체류인구지표를 교부세 산정의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소결

- ① 도시인프라,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시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거주인구와 그에 따른 개발수요라고 할 수 있음
- ② 국토종합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교부세 산정 등에서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한 체류인구를 적용한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개발 수요파악 및 예산배정 필요

IV. 시사점

- 대규모 공공투자의 기준을 현재와 같이 인구에 기반 한 개발수요와 비용편익으로 산정할 경우 인구가 적지만 매력적인 자원을 가진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움
- 1970-80년대부터 SOC와 산업·경제발전을 경부축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높은 경제성의 경쟁력을 향후에도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국토는 수충강권(수도권-충청-강원권)과 부울경대권(부산, 울산, 경남 및 경북, 대구) 중심의 아령형 이극 집중구도의 기형적 형태로 발전
- 국토의 동서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투자의 기준을 단순한 인구가 아닌 장래의 수요를 유발하는 체류인구로 상정할 필요가 있음
-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합한 체류인구개념은 관광을 포함한 실질적인 공공인프라구축의 필요성이 대도시보다 매력적인 공간을 가진 인구과소지역임을 증명
 - 수도권과 부경권 등 대도시권에 거주인구가 집중하여 분포되어 있지만 거주인구와 관광객수를 합한 체류인구는 강원도와 전라도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향후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높음
- 체류인구 현황을 통해 특정지역의 SOC를 포함한 공공인프라와 관광기반시설 등의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지역개발과 국가예산 투자를 결정할 때 기존의 거주인구지표로 파악할 수 없는 실질적 개발수요를 파악할 수 있음
- 매력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로서는 관광과 농촌체험 등을 통해 체류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토종합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교부세 산정 등에서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한 체류인구를 적용한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개발 수요파악 및 예산배정 필요

소결

- ① 공공인프라의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 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한 체류인구를 기준으로 도시계획과 국가예산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거주인구는 185만명이지만 관광객을 포함한 체류인구는 최소 227만명
- ② 전라북도는 체류인구 증대를 위해 매력적인 국토공간과 농촌체험을 활용한 관광객 체류인구 확대전략 필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 (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